

**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**  
**제 2 소 위 원 회**  
**심의 · 의결**

**안 건 번 호** 제2024-217-570호

**안 건 명**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
**피 심 인**

**의결연월일** 2024. 8. 28.

**주 문**

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7,2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2.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 
1년간 공표한다.

# 이 유

## I. 기초 사실

온라인 홈페이지 ‘ ( ) ’을 운영하는 피심인은 「舊 개인정보 보호법」<sup>1)</sup>(이하 ‘舊 보호법’)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 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피심인명	사업자등록번호	대표자 성명	주소	종업원 수(명)

## II. 사실조사 결과

### 1. 조사 배경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(privacy.go.kr)에 유출 신고('22. 8. 30.)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·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('22. 4. 29. ~ '23. 11. 15.)하였으며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# 2. 행위 사실

#### 가. 개인정보 수집현황

피심인은 홈페이지( )를 운영하면서, '23. 6. 25. 기준으로 이용자 74,095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.

1) 법률 제16930호, 2020. 2. 4. 일부개정, 2020. 8. 5. 시행

**< 개인정보 수집 현황 >**

구분	항목	수집일	건수

**나. 개인정보 유출 경위**

**1) 유출 경과 및 대응**

일시		피심인의 유출인지 및 대응 내용
'22. 8. 24.	13:40	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음
	16:23	노출폴더 자료삭제 및 아파치서버 설정파일 디렉터리 옵션값을 비공개로 변경
'22. 8. 29.	오전*	정보주체에게 유출통지(문자, 이메일) * '23. 10. 18. 일부 누락한 정보주체에게 유출통지를 최종 완료함
'22. 8. 29. ~ 9. 30.	17:43	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사실 게재
'22. 8. 30.	10:21	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
'22. 8. 31. ~	-	디렉터리 리스팅 파일 업로드 폴더 변경

**2) 유출항목 및 규모**

이용자       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.

\* 이름, 참가대회, 접수부문, 휴대폰, 출신학교, 결제방법, 결제금액, 아이디, 성별, 작품제목, 승인일시, 취소일시, 환불대상금액, 생년월일, 이메일, 적립포인트, 문자수신 여부, 이메일수신여부

**3) 유출 경위**

피심인이 '22. 6. 11. ~ 6. 12. 웹서버 증설 및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서버 설정파일의 디렉터리 공개 옵션(Options)이 활성화되어 디렉터리 리스팅이 발생\*

하였다. 이로 인해 이 엑셀로 보관하고 있던 홈페이지 회원들의 미술실기대회 공모전 접수자 명단과 이벤트 당첨자 명단이 인터넷 검색 엔진에 노출되었다.

\* 웹서버에 있는 특정경로의 파일들을 웹서비스를 통해 디렉토리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것

### **3. 개인정보의 취급·운영 관련 사실관계**

#### **가.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**

피심인은 서버 설정파일의 디렉터리 공개 옵션(Options)을 잘못 설정하여 운영 중인 홈페이지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이 있다.

#### **나. 불필요해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**

피심인은 2016년에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저장한 240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다.

#### **다.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**

피심인은 '22. 8. 24.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,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이 경과한 '22. 8. 29.과 '23. 10. 18.에 유출 통지하고, '22. 8. 30. 유출 신고한 사실이 있다.

### **4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**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'23. 11. 21.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'23. 12. 4.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## Ⅲ. 위법성 판단

#### 1. 관련법 규정

가. 舊 보호법 제29조는 “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<sup>2)</sup>(이하 ‘舊 시행령’)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“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‘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(마목)’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“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舊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·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舊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<sup>3)</sup>(이하 ‘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’) 제4조제9항은 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, P2P,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다.

나.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“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다.

다.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(이하 “유출등”이라 한다)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(제1호),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(제2호),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(제3호)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(제4호),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

2) 대통령령 제32813호, 2022. 7. 19. 일부개정, 2020. 10. 20. 시행

3)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-3호, 2021. 9. 15., 시행

있는 부서 및 연락처(제5호)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·신고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舊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제3항은 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·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·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·신고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## **2. 위법성 판단**

### **가.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**

[舊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]

피심인이 서버 설정파일의 디렉터리 공개 옵션(Options)을 잘못 설정하여 일부 홈페이지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검색 엔진에 노출된 행위는 舊 보호법 제29조, 舊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, 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.

### **나. 불필요해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**

[舊 보호법 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제1항]

피심인이 2016년도에 이벤트 종료로 처리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해진 회원정보 240건에 대해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舊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.

## 다.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

[舊 보호법 제39조의4(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)제1항)]

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행위는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.

### < 피심인의 위반사항 >

위반행위	법률	시행령	세부내용(고시 등)
안전조치의무 위반	舊 보호법 §29	舊 시행령 §48의2④ 제2호	•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(舊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§4⑨)
개인정보 파기 위반	舊 보호법 §21①	舊 시행령 §16	•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지체없이 파기하지 않은 행위
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	舊 보호법 §39의4①	舊 시행령 §48조의4	•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한 행위

## IV. 처분 및 결정

### 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, 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제1항, 제39조의4(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)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·제4호·제12호의3, 舊 시행령 제63조, 舊 시행령 [별표2] ‘과태료의 부과기준’ 및 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4)(이하 ‘과태료 부과기준’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※ ‘질서위반행위규제법’ 제3조(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)제2항에 따라 ‘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’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(개인정보위 지침, '23.9.15.시행)을 적용함

4) 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, 2023. 9. 15. 시행

## 가. 기준금액

舊 시행령 제63조와 [별표2] '과태료의 부과기준'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을 600만 원으로 산정한다.

### < 舊 시행령 [별표2]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2. 개별기준 >

위 반 사 항	근거법령	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회	2회	3회 이상
자. 법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,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6호	600	1,200	2,400
마. 법 제21조제1항제39조의6(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4호	600	1,200	2,400
도. 법 제39조의4제1항(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이용자·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12호의3	600	1,200	2,400

## 나.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

### 1) 과태료의 가중

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제1항은 '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3]의 가중기준(▲위반의 정도, ▲위반기간, ▲조사방해, ▲위반주도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'라고 규정하고 있고, 제7조2항은 '[별표3]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가중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가중하되,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(개인정보의 파기),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하고, 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(개인정보의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) 위반행위는 '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' 및 '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



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'에 해당하여 15%씩 가중한 기준금액의 30%를 가중한다.

## 2) 과태료의 감경

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제1항은 '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2]의 감경기준(▲당사자 환경, ▲위반정도, ▲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, ▲개인정보 보호인증, ▲자율규제규약 등, ▲개인정보 보호활동, ▲조사협조, ▲자진시정 등, ▲피해회복·피해확산방지, ▲자진신고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'라고 규정하고 있고, 제6조제2항은 '[별표2]의 각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하되, 제2호 1) 및 2)에 해당하는 사유가 각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, 최종 합산 결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.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(개인정보의 파기), 제29조(안전조치의무), 제39조의4제1항(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) 위반행위에 대해 '인 경우(30% 이내)', '시정을 완료한 경우(20% 이내)', '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(20% 이내)'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%를 각각 감경한다.

### 다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(개인정보의 파기), 제29조(안전조치의무), 제39조의4제1항(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) 위반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·감경을 거쳐 총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**< 과태료 산출내역 >**

위반행위(세부내용)	기준금액	가중액	감경액	최종 과태료
안전조치의무 (접근통제)	600만원	-	420만원	180만원
개인정보의 파기 의무	600만원	-	420만원	180만원
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	600만원	180만원	420만원	360만원
합 계				720만원

## 2. 결과 공표

舊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'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<sup>5)</sup>」제2조(공표요건)에 따라,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(제4호)에 해당하므로,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 다만, 개정된 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<sup>6)</sup>」에 따라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					
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.					
순번	위반행위를 한 자	위반행위의 내용		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	
	명칭	위반조항	위반내용	처분일자	처분내용
1		舊 보호법* 제21조제1항	개인정보 파기 의무	2024. 8. 28.	과태료 180만 원
		舊 보호법 제29조	안전조치의무 (접근통제)		과태료 180만 원
		舊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	개인정보 유출 통지·신고 특례		과태료 360만 원
* 舊 보호법 : 2020. 8. 5. 시행, 법률 제16930호					
2024년 8월 28일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					

5) 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, 2020. 11. 18. 시행

6) 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, 2023. 10. 11. 시행

## V. 결론

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1조제1항(개인정보의 파기), 제29조(안전조치의무), 제39조의4 제1항(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)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제2항제4호·제6호·제12호의3, 제66조(결과의 공표)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,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24년 8월 28일

위 원 장     김 진 욱     (서 명)

위     원     김 진 환     (서 명)

위     원     박 상 희     (서 명)